

김정일 당총비서 취임 이후 분야별 정책 전망

1997. 10

전현준(북한연구실장)
최수영(북한연구실 연구위원)
정영태(북한연구실 연구위원)
허문영(북한연구실 연구위원)
김성철(북한연구실 연구위원)
이우영(북한연구실 연구위원)
최진욱(북한연구실 연구위원)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 목 차 -

I. 서 론1

II. 각 분야별 정책 전망2

1. 이념분야
2. 정치분야
3. 경제분야
4. 군사분야
5. 사회분야
6. 외교분야
7. 대남분야

<부 록> '97년 북한의 권력서열 변동 추이

I. 서론

- 김일성 사후 최고지위 미취임 상태에서 실질적 권한을 행사해온 김정일이 10월 8일 당중앙위원회·당중앙군사위원회 공동명의로 당총비서 추대 형식으로 명실상부한 북한내 최고권력자가 됨으로써 김정일 위상에 대한 각종 의문은 일단 종식되었다고 할 수 있음.
- 식량난·에너지난·생활품난·외화난으로 인해 총체적 경제위기에 처한 북한은 김정일의 당총비서 취임을 계기로 '우리식 사회주의'체제 유지를 위해 기존정책에 대한 지속과 변화를 조합한 각종 대내외정책을 전개할 것으로 전망됨.
- 본 보고서는 김정일 정권의 다양한 대내외정책을 전망함으로써 우리의 대북정책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동시에 전문가 및 일반인들의 정세판단에 기여하고자 함.

II. 각 분야별 정책 전망

1. 이념분야

○북한은 김정일 당총비서 취임 이후 각종 문건을 통해 주체사상에 입각한 「붉은기 철학」 고수를 지속적으로 천명하고 있는 바, 향후 큰 이념적 변화는 없을 것으로 전망됨.

가. 주체사상 계승 및 완성

○'74년 후계자 내정 이후 김정일은 김일성에 대한 충성심 과시를 위해 '온사회의 김일성주의화'를 표방하고 「유일사상체계확립 10대원칙」을 작성, '주체혁명위업의 계승'을 후계정당화 논리로 설정하였음. 따라서 김정일은 김일성 사후 신정강정책을 제시하기보다 '김일성 유훈관철'을 강조하면서 '김일성노선의 완성'을 명제화할 수밖에 없었음.

○김정일은 '완성' 명제의 근본을 김일성에 대한 「충실성」, 「무조건성」에 두고 있는 바, 충실성의 요체는 김일성우상화에 있음. 즉 김정일은 김일성에 대한 절대화만이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존재이유가 되고 나아가 자신의 정당성이 발현될 것으로 전제, 김일성우상화에 최대의 정책적 역점을 두어 왔음.

- 김일성우상화의 절정은 김일성 3주기('97.7.8)를 계기로 「주체연호」를 제정하고 김일성 출생연도 '12년을 「주체원년」으로, 김일성생일을 「태양절」로 선포한 것임.

○ 김정일이 총비서직을 승계한 상황에서 '완성' 명제를 관철하는 것은 김정일에 대한 충성심으로서, 이것은 각종매체 및 고위관료들이 '김일성의 영원한 수령' 옹립과 김정일의 영도를 철저히 따를 것을 촉구한데서 잘 나타나고 있음. 따라서 향후 '김일성 유훈관철'이라는 미명하에 김정일우상화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됨.

- 노동당 창건 52주년 중앙보고대회('97.10.9)에서 김기남은 김일성을 영원한 수령으로 모시자고 주장하였음.¹⁾

나. 「붉은기 철학」의 지속과 혁명적 군풍 강조

○ 북한은 '96년 「붉은기 철학」을 제기하면서 김정일이 내놓은 새로운 혁명철학이라고 선전하였는 바,²⁾ 체제이탈이 점증하는 상황에서 이같은 주장은 계속 견지될 것으로 전망됨.

- 「붉은기 철학」은 모든 주민과 간부들을 '혁명가'와 '배신자'로 이분화하여 체제이반을 막는 수단으로 사용될 것으로 보임.

1) 「중앙방송」, 1997.10.9.

2) 붉은기란 슬로건이 소위 철학으로 선전되기 시작한 중요한 계기는 '96년 1월 1일 당보, 청년보에 “붉은기를 높이 들고 새해의 진군을 힘차게 다그쳐 나가자”란 제하의 공동사설 게재임.

○ 한편 '96년 「공동사설」을 통해 제기된 三大障地論은 「붉은기 철학」의 실천과제로서 기존의 3대혁명을 보완하는 것이며, 특히 군사적 진지 강조는 군부의 역할부상과 함께 등장한 것이어서 주목되는 바, 향후 경제적 난관 해결을 위해 '고난의 행군정신'식의 혁명적 軍風이 보다 강도높게 강조될 것으로 전망됨.

- 군사적 진지 강화문제는 무력강화론과 함께 '혁명적 군인정신의 全社會化'를 의미하고 있음.
- 이와 관련 북한은 주민들에게 '총폭탄정신,' '자폭정신' 강조를 통한 전투적 사상무장 강화를 지속적으로 강조할 것으로 보임.

다. 서방식 개혁·개방 반대

○ 김정일은 주체사상의 완성자로서 주체사상의 핵심인 '자주'를 주민통합을 위한 중심가치로 삼아왔음. 물론 김정일은 '자주'가 '폐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변하지만 '자주'는 분명히 국수주의적, 저항민족주의적 요소를 내포, 서방세계의 경계대상이 되고 있음.

- 김정일은 경제난 타개를 위해 미·일과의 접촉을 강화하면서도 내면적으로는 서방세계를 제국주의로 매도하고 영원히 '자주적으로' 즉, 폐쇄적으로 살 것임을 강조하고 있음.

○따라서 김정일이 김일성의 유훈관철을 전략목표로 설정한 이상 지속적으로 외부사조의 침투를 경계하면서 중국식 개혁·개방정책 채택에도 신중을 기할 것으로 전망됨.

- 김정일은 금년 황장엽 망명과 관련한 담화('97.2.17, 3.5)³⁾에서 개혁·개방을 반동적 이론으로 치부하고 황이 이에 굴복한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음.

2. 정치분야

○김정일은 후계자 책봉 이후 20년 이상 안정적 후계체제 유지에 필요한 조직개편 및 인물등용을 시행해 왔는 바, 금번 김정일의 총비서직 승계가 조직·인물을 포함한 정치체제에 급격한 변화를 야기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됨.

- 김일성 사망 이후 만3년 이상 김정일은 김일성 '유훈관철'을 정책방향으로 제시하였고 김일성노선 고수를 천명하여 왔음.
- 금년 2월 17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에서 “우리는 절대로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이 요구하는 개혁·개방의 길로 나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
- 김정일의 총비서 추대 4일 전인 10월 4일 평양방송을 통해 북한은 향후 과거의 김일성노선과 0.001mm의 정책차이도 없을 것임을 강조⁴⁾

3) 김정일, “혁명적 신념과 량심은 혁명가와 배신자를 가르는 기본징표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97.2.17, 3.5).

4) 「평양방송」, 1997.10.4.

가. 유일지배체제 유지

- 북한정치체제의 특징은 수령유일사상체계와 수령유일지배체제라고 할 수 있는 바, 주체사상에 입각한 수령절대체제는 사회주의권 붕괴·절대자 김일성 사망이라는 주객관적 상황의 급격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지속되어 왔음.
 - 수령론은 주체사상의 정수로서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에서 보여 지듯이 거의 종교적 교리로 전변된 상태임.

- 향후 제2의 수령인 김정일 정권에서도 수령유일지배체제는 변함이 없을 것이고 수령체제의 제도적 표현인 당총비서와 국가주석은 분리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 한편 북한은 '92년 헌법개정을 통해 주석으로부터 군통수권을 박탈하였으나 향후에는 김정일이 당과 무력을 직접 지휘통솔하는 체제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됨.
 - 당중앙위원회와 당중앙군사위원회가 공동으로 김정일을 당총비서로 추대한 사실에서 향후 김정일이 당총비서·군최고사령관·당중앙군사위원장·국방위원장을 겸할 수 있도록 개헌할 가능성이 있음.
 - 김정일권력 강화를 위해 주석과 국방위원장을 통합하고 최고인민회의로부터 주석소환권을 삭제하는 개헌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나. 충성과 등용 강화

○ 후계자 내정 이후 김정일은 김일성부자 세습체제 안정화 및 강화를 위해 전문성보다는 충성심 중심의 관료등용정책을 채용해 왔는 바, 향후에도 정권안정성 확보를 위해 자신에 대한 충성파를 상승이동시킬 가능성이 높음.

- 장성택, 염기순, 문성술, 이용철 등이 새로운 당비서 및 당부장에 임명되고 호위사령관 이을설, 총정치국장 조명록, 총참모장 김영춘 등을 정치국 정위원으로, 당군사부장 이하일, 인민무력부 군수동원국장 이종산 등을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승격시킬 가능성이 있음.

○ 한편 김정일은 체제안정을 위해 노·장·청을 고루 등용하는 간부정책을 사용하여 왔는 바, 향후 당원로 예우를 통한 정당성시비 불식을 위해 정치국상무위원에 대한 수적 보강작업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음.⁵⁾

- 이종욱·박성철·김영주 부주석, 이을설 원수 등이 당정치국상무위원으로 보임될 가능성이 있음.

5) 이러한 예상은 김정일의 금수산기념궁전 참배시('97.10.10) 권력서열에서 찾아볼 수 있음. 「부록」 참조.

다. 기존 대남정책노선과 정책 고수

- 북한 조선노동당은 국가와 사회를 이념적·실질적으로 통제하는 막강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음. 이러한 노동당의 존재이유는 남한공산화를 통한 한반도통일에 있는 바, 해방 이후 현재까지 노동당은 남한지역의 공산화를 위해 제반 수단을 동원해 왔음.
- 따라서 현 당규약에 명시된 당면목표인 북한내에서의 사회주의 완전 승리와 전국적 범위에서의 민족해방 및 인민민주주의 혁명 과업 완수, 최종목표인 은사회의 주체사상화와 공산주의사회 건설⁶⁾ 등은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이와 함께 사회주의·공산주의 건설의 총노선으로서 현규약에 명시된 천리마운동과 사상·기술·문화혁명 추진이 지속적으로 강조될 것으로 보임.
 - 다만 주민동원 편의를 위해 「붉은기 철학」 강조가 추가될 것으로 전망됨.

3. 경제분야

- 김일성 사후 3년간 김정일은 경제난 타개를 위해 제한적 개방, 미국과의 관계개선, 남한기업과의 경협, 국제기구의 지원 획득 등의

6) 당규약 前文 참조.

제한적 개방정책을 시행해 왔는 바, 이러한 정책기조는 향후에도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전망됨.

가. 부분적인 농업개혁

○해방 이후 토지개혁을 통해 농민의 절대적 지지를 받은 북한은 사회주의체제 유지를 위해 협동적 소유를 실현하고 전인민적 소유를 꾸준히 추진하는 한편 주체농법을 동원하여 식량증산에 매진하였음.

○그러나 주체농법의 근본적 한계와 각종 천재지변으로 인해 심각한 식량난에 봉착해 있는 바, 식량증산을 위해 주체농법고수를 전제로 부분적인 농업개혁을 시도할 것으로 전망됨.

- 북한은 '96년부터 분조관리제 개선, 즉 분조의 규모 축소·생산 목표량 하향 조정·농가의 처분권 확대 등을 시행⁷⁾하였으나 그 성과는 미미하였는 바, 생산성 증대를 위해 집단농장체제하에서 가족단위가 중심이 되는 농가책임생산제를 병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7) 「조선신보」, 1996.10.24.

나. 개방정책 심화와 개방지역 확대

- 북한은 외화난 타결을 위해 '91년 나진·선봉특구를 설치하였으나 정치적 불안정, 사회간접시설 미비 등으로 인해 소기의 목적 달성에 실패하자 '97년 6월 투자촉진을 위해 일련의 주요 결정들을 채택·시행하였는 바, 나진·선봉특구내 '외화와 바꾼돈표' 사용 폐지, 달러 환율 조정, 기업에 대한 독립채산제 적용, 주민에게 자영업 허용, 원정리에 조·중공동시장 개설 등의 경제개혁 조치를 취했음.⁸⁾

- 이와 같은 추세로 보아 북한은 주체사상 고수와 제한적 개방원칙 하에 외화난 타결을 위한 자구책으로 서방세계의 대북투자 및 방문에 유리한 지역을 추가 개방할 것으로 전망됨.
 - 북한은 북·중무역 활성화를 위해 신의주를, 관광소득 증대를 위해 원산을, 남한투자증대를 위해 남포를 특구로 지정할 가능성이 있음.

다. 지방기관의 자율성 증대

- 중앙배급체계 붕괴로 인해 북한은 자력갱생적 차원에서 경제기관들의 자율성을 증대시켰음.
 - 경제적 권한과 책임이 중앙정부로부터 지방기관으로 분권화되기 시작함. 즉 지방정부들이 필요물품 조달을 위해 무역회사

8) 「한겨레신문」, 1997.8.18.

설립, 외국기관과 직접 경제관계 수립, 지방정부가 주민들을 위한 시범사업과 구조개혁 등을 시행하였음.

- 따라서 향후 북한은 식량증양공급체계 복원시까지 한시적으로 지방기관의 자율성 확대에 의한 중앙·지방간 갈등을 감수하고 지방조직, 각급 기업소, 협동농장 등의 자력갱생적 자율성을 확대할 것으로 전망됨.

라. 국제경제기구 가입 확대

- 북한은 그동안 자본주의 세계체제 편입 거부원칙에 입각, ADB, IMF 등과 같은 국제경제기구에의 가입을 자제해 왔음.
 - 북한은 대외종속을 우려, COMECON 가입까지 거부하였음.
- 그러나 북한이 최근 ADB, IMF 등에 가입신청을 함으로써 경제난 타결을 위한 국제기구가입 노력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됨.
 - 물론 북한의 국제기구가입은 미국을 비롯한 서방세계의 적극적 지지, 북한의 성실한 자료제공 등이 선행되어야 하지만 미국의 대북 연착륙정책에 입각한 '특별조치'가 취해진다면 국제기구 가입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됨.

4. 군사분야

○ 김일성 사후 김정일은 체제유지를 위해 군중심의 '군사비상체제'를 유지해 왔는 바, 북한이 처한 환경의 급격한 전변이 없는 한 군사력강화 및 군우대정책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가. 군사력 증대정책 지속

○ 국가목표를 「무력에 의한 남조선해방」에 둔 북한은 목표달성 수단으로 호전적·공세적인 대남군사정책을 유지하여 왔음.

- 북한은 지상군 부대의 기계화·자주화 추진, 장·사거리 자주포 및 방사포와 탄도미사일의 실전배치, 핵무기 보유 노력 및 대량의 화생무기의 보유, 기갑·기계화 부대의 여단급으로 재편, 소규모 해상침투 능력 증대, 주요 전력의 전진배치 등을 완료함.

○ 북한은 대남군사력 우위를 통한 통일हे계모니 장악전술을 구사해 왔을 뿐만 아니라 경제난으로 인한 체제불안이 가속화되면 될수록 군사력에 의한 체제유지 의존도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됨.

나. 군부우대정책 지속

○ 사회주의권 붕괴, 김일성 사망, 식량난 등으로 인해 체제붕괴위기에 몰린 김정일은 군우대정책을 통해 군부의 충성심을 도출하고 군의 충성심을 주민통제에 활용하는 정책을 구사해 왔음.

- 김정일은 인민군 214부대 방문('95.1.1), 제564 공군대연합부대 방문('97.10.10) 등을 포함 총2,000여개의 부대 및 초소 방문⁹⁾을 통해 군의 충성을 유도하였음.
- 김정일은 오진우(사망)·최광(사망)·이을설(호위사령관)을 원수로, 백학림(사회안전부장)·조명록(총정치국장)·김영춘(총참모장) 등을 차수로 승진시키는 등 '92년 이후 약 1,000여명의 장성승진을 통해 군부의 충성을 유도함.
- 또한 김정일은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군사분야의 투자를 지속적으로 증대시켰음.¹⁰⁾

○군사력에 의한 한반도통일 및 대외협상력 강화 방침이 변하지 않는 한 김정일의 군부우대정책은 오히려 강화될 것으로 전망됨.

- 이와 관련 김정일은 “경제사정이 아무리 어렵고 부담이 크더라도 선군후로(先軍後勞)하라”고 지시하였음.¹¹⁾

다. 군사문화의 확산

○북한은 한국전쟁 패배 이후 군사력에 의한 한반도 통일을 위해 군사력 강화에 매진하여 왔고 이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전 인민의 무장화'를 주요 군사목표로 삼아 왔기 때문에 주민은 매우 전투적인 심성을 지니고 있음.

9) 「중앙방송」, 1997.9.23.

10) 「97-98 국방백서」는 북한의 지속적인 군사력 증대를 보여주고 있음.

11) 「중앙방송」, 1997.10.7.

- 북한은 군사문화 확산을 위해 국방체육 생활화, 천리행군 강요, 비상식량 준비 의무화, 대남적개심 고취 등을 시행해 왔음.

○북한은 전시공산체제라 할 수 있을 만큼 사회체제가 군사화되어 왔는 바, 김정일의 '문민' 상징인 당총비서 취임에도 불구하고 효율적 사회통제를 위해 '전사회의 군사화' 작업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¹²⁾

- 김정일은 '96년 12월 7일 비밀교시를 통해 軍당관료의 당성에 대해 극구 칭찬한 반면, 당·정무원관료들의 무능을 질책하였는 바, 향후 사회전체로의 군사기풍 확대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임.
- 특히 군출신의 당·정진출이 두드러 질 것으로 전망됨.

5. 사회분야

○북한은 세습체제 유지를 위해 김일성·김정일우상화 확대, 경제난으로 인한 사회일탈 증대에 대한 주민통제를 강화해 왔는 바, 경제난 심화가 지속되는 한 주민에 대한 정신적·육체적 통제는 더욱 증대될 것으로 전망됨.

12) 김기남은 당창건 52주년 중앙보고대회시 인민의 군대사랑을 강조하였음. 「중앙방송」, 1997.10.9.

가. 주민통제 강화

- 경제난 해결을 위한 부분적 개방은 필연적으로 외부정보 유입증대와 해외여행증가를 야기하였고 이로 인해 사상적 해이와 사회일탈이 증대되어 왔는 바, 북한은 사회통제를 위해 사회안전부·국가안전보위부는 물론 군까지 동원하였음.
 - 사상적 해이는 주체사상 부정, 김일성부자 비판, 부정부패 만연, 대미·대남 적개심 약화를 초래하였고 심지어 주체사상 이론가인 황장엽이 망명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하였음.
 - 북한은 사회통제 강화를 위해 국방에만 전념해야 할 군까지 동원하였음.

- 북한은 주민들의 사상적 오염 차단을 위해 자본주의의 부당성, 남한의 북침론 등을 집중적으로 강조하고 각종 집회와 매체 등을 통해 '우리식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한편, 불복종자들에게는 가혹한 처벌을 가해왔는 바, 향후에도 이러한 주민통제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됨.
 - 부분적인 개방에 대비 주민들에 다각적인 사상교양을 강조할 것인 바, 그 내용은 북한체제의 고유성과 자본주의의 부정적인 요소를 강조하는 것이 될 것임.

○ 아울러 자본주의와 접촉하는 주민들과 탈북자들에 대한 통제와 관리가 보다 엄격해 질 것이며, 탈북자를 비롯한 일탈 행위자에 대한 처벌도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됨.

- 북한은 주민들의 탈북의지 불식을 위해 함경남·북도, 양강도, 자강도, 평안북도 등 국경 및 북부 지방의 ‘반간첩 투쟁전람관’에 탈북자 관련 자료실을 설치하여, 국경을 넘다가 체포된 탈북자 모습과 중국에서 잡힌 탈북자 송환 사진 등을 전시하고 있음.

나. ‘인덕정치’ 강조

○ 강력한 대주민통제와 함께 북한은 김정일의 ‘인덕정치’를 강조함으로써 강·온양면적 주민통제정책을 시행하여 왔음.

- 핵심·동요·적대 등 3계층과 약51개 부류로 구분하여 취해진 주민통제는 체제불만자를 양산하였고 이것은 사회통합의 걸림돌로 작용하여 왔으나, 최근 김정일은 적대계층에 대한 포용을 통해 자신의 후덕함을 과시하고 그에 대한 충성심 제고를 시도해 왔음.

○ 당총비서 취임을 계기로 김정일은 ‘廣幅政治,’ ‘仁德政治’를 더욱 강조하는 한편, 파격적인 선물전달을 통해 충성심을 제고시키고 “김일성=김정일” 등식을 고착화시키려 할 것으로 전망됨.

- 인덕정치가로서의 면모과시, 자신의 과오에 대한 책임전가, 주민불만 해소를 위해 김정일은 당·정·군 관료들을 대상으로 부정 부패 척결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있음.

6. 외교분야

- 사회주의권 몰락 이후 체제붕괴위기에 몰린 북한은 대미관계 개선을 기본적 생존전략으로 채택하여 왔는 바, 향후에도 대내정책과는 달리 대미·일관계 개선 노력을 포함, 보다 유연한 대외정책을 채택할 것으로 전망됨.¹³⁾

가. 개혁없는 개방정책 지속

- 앞으로 남한내의 혁명역량이 다소 회복된다 할지라도 북한의 3대 혁명전략은 전반적으로 약화되는 추세를 면할 길이 없으며, 북한 지도부 또한 현실타협적 정세인식을 보다 많이 수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북한은 대외관계에 있어 과거보다는 유화적인 개방정책을 선택할 것으로 보임.

13) 북한은 「1996년도 대외활동 방향」에서 대주변4강정책으로서 대미관계 개선을 통한 일본 및 서유럽 자극, 대일 고자세, 대중 전통적 친선관계 유지, 대러 접근유도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짐. 한편 동남아국가들과는 경제협력율, 비동맹 국가들과는 연대성 강화를 강조하였다고 함. 「전북한 외교관 증언」(민족통일연구원 내부토론회시 증언, 1997.5.29). 아울러 김정일은 “미국을 백년숙적으로 보려 하지 않으며 조미관계가 정상화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하여 대미관계 개선의지를 분명히 했음. 자세한 내용은 김정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조국통일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자(1997.8.4),” 「로동신문」, 1997.8.20 참조.

- 북한은 주변국가들의 대북 체제보장을 유도하기 위해 상호견제적 영향력확대 경쟁을 심화시키는 유인외교와 경제난 타개를 위한 제한적 경제개방정책을 적극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 그러나 황장엽 망명사건을 고려할 때, 북한은 김정일 정권의 안정과 체제유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근본적 개혁없는 개방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음.

나. 대미관계 개선 강화

- 안보유지 및 경제난 해결을 위해 북한은 대미접근정책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됨.
 - 북한은 경제난을 타개하기 위해 연락사무소 개설 수준의 관계 개선은 조속히 성사시키려 할 것이나, 미사일 수출 및 개발 포기 의 어려움과 자유화 바람 유입에 따른 체제불안정화 가능성을 의식하여 전면 개방을 의미하는 대사관 개설 등 관계정상화는 서두르지 않을 것으로 보임.
 - 따라서 북·미 평화협정 체결, 주한미군 철수 주장, 「4자회담」 등을 대미관계 개선 속도 조절수단으로 사용할 뿐 아니라, 단기적으로는 정권유지를 위한 내치용 선전수단으로, 장기적으로는 대미 협상목표로 활용할 것으로 전망됨.

다. 대중 혈맹관계 복원 노력

- 대중관계에 있어 북한은 전통적 혈맹관계 복원에 정책적 역점을 둘 것으로 전망됨.
 - 북한은 체제안정 및 경제원조 획득과 대미·일관계 개선과정에서의 유리한 협상입지 확보를 위해 최대 후원국인 중국과의 관계 강화에 주력할 것으로 보임.
 - 그러나 한·중수교와 북·미관계 개선으로 북·중간에는 보이지 않는 갈등이 존재하는 바, 북한이 대중관계 지렛대로서 '대만 카드'를 활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라. 대일 실리외교 지속

- 대일관계에 있어 북한은 접근정책과 강경정책을 병행하면서 실리외교를 전개할 것으로 전망됨.
 - 김정일 정권은 대미관계 개선이 이루어질 때까지 쌀 외교와 일본인처 고향방문¹⁴⁾ 등 인민외교에서는 유연한 태도를 취하되, 수교회담 재개협의 등 정부간 협상에서는 강경한 태도를 병행할 것으로 예상됨.
 - 단 나진·선봉특구 활성화를 위해 대일 경협에는 적극적 태도를 취할 가능성이 높음.

14) 북송일본인처 15명의 1차 방일이 10월 29일 이루어질 것으로 알려짐. 「중앙일보」, 1997.10.11.

마. 대러 친선관계 복원노력

- 한·러수교 이후 소원했던 대러관계 회복을 위해 북한은 적극적인 초청·방문외교를 추진할 것으로 전망됨.
- 군사력 편제와 경제구조에 있어 상당부분 러시아 의존적인 북한으로서는 대한반도 균형외교정책을 추진하려는 러시아의 외교정책 전환에 부응하는 것이 정치·군사 및 경제적으로 유익할 것이기 때문임.

7. 대남분야

- 한반도의 공산화를 국가목표로 삼고 있는 북한의 대남적대정책은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가. 대남적대정책 지속

- 북한의 대남정책은 「전조선혁명」을 달성하기 위한 제반 여건 즉, 남한혁명을 위한 주객관적 정세를 조성하는데 집약되고 있는 바, 정책기조는 불변이며 다만 전술적 차원의 정책변화가 다양하게 전개되어 왔음.
- 이러한 맥락에서 김정일 정권은 기본적으로 향후에도 기존의 공세적인 대남정책을 계속 견지할 것으로 전망됨.

- 그 이유는 한반도에 지속적인 전쟁분위기를 고조시킴으로써 내부적으로는 점증하고 있는 북한주민의 불만과 갈등을 무마시켜 체제결속을 기할 수 있고, 또한 한국 및 국제사회를 긴장시켜 북한이 의도하는 대로 대남·대외정책을 구사할 수 있기 때문임.

나. 대남군사위협 공세 강화

○북한은 극심한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군사력 증강에 박차를 가하고 대남군사위협 공세를 지속적으로 전개해 왔는 바, '95년 통일 실현을 위해 이미 '93년 7월 김정일의 특별지시로 3단계 시한부 전쟁준비를 완료한 바 있음.

- 그동안 북한은 지속적인 군사력 증대는 물론 간첩남파, 정찰지속, 군사분계선 월경 등 다양한 대남군사위협을 자행하였음.

○대남 군사우위를 확보하고 있는 북한은 대선정국 등에 편승, 남한 사회교란을 목적으로 전쟁불사 선전과 함께 육상·해상·공중에서의 무력시위 등 제한적인 도발을 자행해 한반도에 긴장을 고조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특히 정전협정 무력화와 북·미평화협정 체결노선과 맞물려 긴장고조 전술이 실천될 가능성이 큼.

다. 당국간 대화거부정책 견지

- 김정일 정권은 ‘김일성조문파동’을 빌미로 남북대화를 일방적으로 중단한 채, 지금까지 당국간 공식대화를 거부하며 한국정부 배제 정책을 고수해온 입장을 계속 견지할 것으로 보임.
 - 다만 쌀지원 등 대북 경제지원과 같이 북한측의 이해가 걸린 사안을 매개로 적십자회담과 같은 민간차원이나 비공식 채널에 의한 대화에는 선택적으로 호응할 것으로 전망됨.
 - 특히 '98년 한국의 신정권 출범 이후,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통일을 위해 김정일이 노력한다는 이미지를 제고하고 경제난 해결의 수단을 찾기 위해 ‘일회성’ 당국간 대화에 응할 가능성은 있음.

라. 상하층 통일전선공작의 가속화

- 김정일 정권은 국내 친북좌익권이나 재야운동권을 규합하기 위해 범민족대회 등 통일전선공작을 다양하게 전개할 것이며, 특히 하층 통일전선을 바탕으로 상층 통일전선 공작에 주력할 것으로 보임.
 - 특히 북한은 '97년을 ‘민족자주와 평화수호를 위한 북남·해외 3자 연대의 해’로 정한 바 있어, 3자연대와 함께 해외교포 등을 대상으로 통일전선공작도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됨.

○또한 국제사회에서 한국정부를 고립시키고 김정일 정권의 국제적 인정 등 한반도정세를 북한에 유리하게 유도하기 위해 미국, 유엔 및 국제사회의 유력정치인, 언론계 인사 등을 대상으로 한 초청·방문외교 활동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됨.

<부 록>

'97년 북한의 권력서열 변동 추이

서 열	군창건 65주 열병식 ('97.4.25)	김일성 3주기 추모대회 ('97.7.8)	당총비서 추대후 금수산기념궁전 참배 ('97.10.10)
1	김 정 일	김 정 일	김 정 일
2	이 중 욱	이 중 욱	이 중 욱
3	박 성 철	박 성 철	박 성 철
4	김 영 주	김 영 주	김 영 남
5	이 을 설	김 병 식	계 응 태
6	조 명 록	강 성 산	전 병 호
7	김 영 춘	김 영 남	한 성 룡
8	강 성 산	계 응 태	이 을 설
9	김 병 식	전 병 호	조 명 록
10	김 영 남	이 을 설	김 영 춘
11	계 응 태	조 명 록	양 형 섭
12	서 윤 석	김 영 춘	최 태 복
13	전 병 호	한 성 룡	김 철 만
14	한 성 룡	양 형 섭	홍 성 남

서 열	군창건 65주 열병식 (’97.4.25)	김일성 3주기 추모대회 (’97.7.8)	당총비서 추대후 금수산기념궁전 참배 (’97.10.10)
15	양 형 섭	최 태 복	최 영 립
16	최 태 복	김 철 만	홍 석 형
17	김 철 만	홍 성 남	김 국 태
18	연 형 목	최 영 립	김 기 남
19	홍 성 남	홍 석 형	김 중 린
20	최 영 립	김 국 태	김 용 순
21	홍 석 형	김 기 남	전 문 섭
22	김 국 태	김 중 린	백 학 립
23	김 기 남	김 용 순	이 하 일
24	김 중 린	백 학 립	김 일 철
25	김 용 순	전 문 섭	김 익 현
26	백 학 립	김 복 신	박 기 서
27	전 문 섭	김 윤 혁	이 중 산
28	김 일 철	장 철	김 복 신
29	이 하 일	공 진 태	김 윤 혁
30	전 재 선	윤 기 복	장 철
31	박 기 서	이 하 일	공 진 태

서 열	군창건 65주 열병식 (’97.4.25)	김일성 3주기 추모대회 (’97.7.8)	당총비서 추대후 금수산기념궁전 참배 (’97.10.10)
32	이 종 산	김 일 철	윤 기 복
33	김 복 신	김 의 현	유 미 영
34	김 윤 혁	전 재 선	-
35	장 철	박 기 서	-
36	공 진 태	이 종 산	-
37	유 미 영	유 미 영	-
38	-	김 성 애	-

最近 發刊資料 案內

■ 연구보고서

96-01	김정일의 당권장악과정 연구	최진욱	著	6,000원
96-02	통일과정에서 매스미디어의 역할	이우영	著	6,000원
96-03	동서독 인적교류 실태 연구	김학성	著	6,500원
96-04	동서독간 정치통합 연구	황병덕	著	6,000원
96-05	남북한 환경분야 교류협력 방안 연구: 다자적·양자적 접근	손기웅	著	7,000원
96-06	북한과 주변4국의 군사관계	鄭永泰	著	6,000원
96-07	韓美 安保協力 增進方案 研究	金國新	著	4,000원
96-08	東北亞 平和體制 造成方案	余仁坤 金永椿 申相振의共著		10,000원
96-09	北韓 經濟改革의 最適方向 研究	吳承烈	著	6,500원
96-10	통일과정에서 민간단체의 역할	조민	著	5,000원
96-12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정에서의 한국의 안보정책 방향	박영호	著	5,000원

96-13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제성호	著	5,500원
96-14	북한 사회의 계급갈등 연구	서재진	著	7,500원
96-15	통일과정에서의 정당역할 연구	김도태	著	4,500원
96-16	KEDO체제하에서 남북한 협력증진에 관한 연구: 협력이론을 중심으로	전성훈	著	5,000원
96-17	남북한 에너지분야 협력방안 연구	박순성	著	4,000원
96-18	북한이탈 주민의 사회적응에 관한 연구: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박종철 김영운 이우영	共著	7,000원
96-19	북한의 경제정책 변화와 남북경협 활성화 방안	허문영	著	5,500원
96-20	미국의 대북한 경제제재 완화와 남북한 관계	김규륜	著	3,500원
96-21	북한의 노동정책과 노동력 평가	남궁영	著	5,700원
96-22	한-러 안보협력 방안 연구	강원식	著	8,500원
96-23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위기수준 평가 및 내구력 전망	김성철 정영태 오승렬	共著	8,500원
96-24	북한체제의 변화주도세력 연구	이교덕	著	4,500원
96-25	북한의 농업정책과 식량문제 연구	최수영	著	4,000원

96-26	북·미관계 개선과 북한의 대남정책 변화 전망	이현경	著	6,500원
96-27	한·일 안보협력방안 연구	전동진	著	4,500원
96-28	북한의 유일체제와 정책경쟁	안인해	著	5,500원
96-29	韓·中 安保協力方案 研究	崔春欽	著	3,500원
97-01	한반도 통일과정에서 러시아의 역할	강원식	著	5,000원
97-02	북일수교와 남북한 관계	이교덕	著	3,500원
97-03	경수로인력의 북한체류시 법적 문제	제성호	著	7,000원
97-04	中·北關係 전망 -미·북관계와 관련하여-	신상진	著	4,000원
■ 북한인권백서				
북한인권백서 1996		옥태환 전현준 제성호의共著		10,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1996</i>		옥태환 전현준 제성호의共著		10,000원
북한인권백서 1997		김병로 송정호 共著		10,000원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1997

김병로
송정호 共著 \$11.95

■ 연례정세보고서

96 統一環境과 南北韓 關係: 1996~199 6,000원

■ 학술회의 총서

96-01 북한정세 변화와 주변4국의 대한반도정책 7,000원

96-02 脫冷戰期 韓半島의 戰爭과 平和 9,000원

96-03 북한경제제도의 문제점과 개혁 전망 9,000원

96-04 북한의 대외관계 변화와 남북관계 전망 7,500원

96-05 南北韓關係 現況 및 '97年 情勢 展望 7,000원

96-06 4자회담과 한반도 통일전망 8,500원

97-01 4자회담과 한반도 평화 6,500원

97-02 분단비용과 통일비용 7,500원

97-03 한반도 통일을 향하여: 정책과 국제환경 7,000원

■ 통일문화시리즈

96-01 統一과 北韓 社會文化(上) 14,500원

96-02 統一과 北韓 社會文化(下) 9,500원

■ 논총

統一研究論叢, 제5권 1호 (1996. 6)	15,000원
統一研究論叢, 제5권 2호 (1996.12)	15,500원
統一研究論叢, 제6권 1호 (1997. 7)	14,500원
<i>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i> , Vol. 5 (1996)	6,500원

민족통일연구원 定期會員 가입 안내

민족통일연구원은 통일문제가 보다 현실적인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그동안 제한적으로 유관기관과 전문가들에게만 배포해 오던 각종 연구결과물들을 보다 폭넓게 개방하여 전국의 대형서점에서 개별구입하거나 본 원의 定期會員에 가입하여 구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원의 간행물 분량이 많아 일일이 서점에서 구입하기에는 번거로움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定期會員制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정기회원에게는 본 원의 모든 간행물(연구보고서, 국문 및 영문 저널, 학술회의 총서, 판매되지 않는 수시 「정세분석보고서」 등)을 직접 우편으로 우송해 드리는 것은 물론 학술회의 초청 등 회원의 권리를 부여하오니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1. 정기회원의 구분

- 1) 일반회원 : 학계나 사회기관에서의 연구종사자
- 2) 학생회원 : 대학 및 대학원생
- 3) 기관회원 : 학술 및 연구단체 또는 도서관 등의 자료실

2. 회원가입 및 재가입

- 1) 가입방법 : 회원가입신청서를 기재하여 入金證과 함께 본 연구원으로 FAX 혹은 우편으로 보내 주심으로써 정기회원 자격이 취득됩니다.
- 2) 연 회 비 : 회원자격은 가입한 날로부터 1년간입니다.
일반회원은 10만원, 학생회원은 7만원, 기관회원은 15만원임.
- 3) 납부방법 : 신한은행 온라인 310-05-006298(예금주: 민족통일연구원)
- 4) 재 가 입 : 회원자격 유효기간 만료 1개월전 회비를 재납부하면 됩니다.
(재가입 안내장 발송).

3. 정기회원의 혜택

- 1) 본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 및 국내학술회의등 연구행사에 초청됩니다.
- 2) 본 연구원이 발행하는 정기간행물 「통일연구논총」과 *The Korean Journal of Unification Studies*를 포함하여 그 해에 발행되는 단행본 연구보고서(연평균 25~30권), 학술회의 총서(연평균 5~6권), 정세분석보고서(연평균 10~15권) 등의 간행물이 무료 우송됩니다.
- 3) 본 연구원에 소장된 도서 및 자료의 열람, 복사이용이 가능합니다.

4. 회원가입 신청서 제출 및 문의처

서울시 강북구 수유6동 535-353

민족통일연구원 정보자료실 (전화: 901-2586, 901-2613, FAX: 901-2547)

김정일 당총비서 취임 이후 분야별 정책 전망

統一情勢分析 97-10

發行處 民族統一研究院

編輯人 民族統一研究院 北韓研究室

서울 강북구 수유6동 535-353

전화: 901-2525(代), FAX: 901-2542

印刷處 陽東文化社 전화: 266-0892

印刷日 1997년 10월 일

發行日 1997년 10월 일
